

## “평화가 길이다” Peace Is the Way

오랫동안 일촉즉발 하에 있던 한반도가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 4월 27일, 분단 70여년 만에 남북 정상은 처음으로 판문점 남쪽에서 만나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민족 공동 번영과 통일의 길로 향하는 흔들리지 않는 이정표(문재인, 2018)”를 세우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길은 그리 녹록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 “그 길에는 외풍과 역풍도 있을 수 있고 좌절과 시련(김정은, 2018)”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성공해야 하는 이유는 수 없이 많다. 그 중에서 평화가 보건복지영역의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인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화의 반대말이라고 할 수 있는 전쟁은 개인과 집단을 철저히 파괴한다. 영국 소재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발표한 연례 『무력충돌 조사(Armed Conflict Survey)』에 따르면 2016년 무력충돌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수는 15만 7,000명에 달한다. 이중 시리아, 멕시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예멘, 소말리아, 수단, 터키 이상 10개국의 사망자수가 전체 사망자수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시간에도 약 36개 나라에서 무력충돌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IISS, 2017). 심지어 세계보건기구와 세계은행은 2020년까지 전쟁이 사망과 장애의 10대 원인이 될 것이라 추정하기도 했다(Lopez & Murray, 1998).

전쟁 시 가장 큰 피해는 늘 어린이와 같이 가장 힘없는 이들의 몫이다. 유엔의 연례보고서 『어린이와 무력분쟁(Children and armed conflict)』은 예멘과 시리아, 이라크, 남수단 등에서 발생한 무력분쟁으로 1만 명 이상의 어린이가 죽거나 장애를 갖게 됐으며 아동 인권 위반 사례도 2만 건이 넘었다고 하였다. 또한 예멘에서는 어린이 사상자 1천 3백 명 가운데 최소 절반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의 공격으로 목숨을 잃었고 남수단에서는 1천 2백여 명의 어린이가 징집돼 전장으로 내몰렸다고 보고했다(UNSG, 2018).

둘째, 전쟁은 직접적인 사상자뿐만 아니라 대규모 난민을 양산한다. 7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시리아내전은 이미 278만 명이 넘는 난민을 만들어 냈고, 미얀마에서는 70만 명이 넘는 로힝야 난민이 발생하였다. 이들 난민들은 도피 중 다수가 사망하고 강간, 납치 등 범죄에 노출되며, 이들이 임시로 거주하는 난민 수용소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기아와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이 문제는 이제 다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제주도로 들어온 예멘 난민은 한국 사회 내에서도 심각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셋째, 전쟁과 전쟁준비 비용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을 고갈시킨다. 전쟁 비용은 말할 것도 없이 국가 간, 사회 내 갈등이 심해질수록 전쟁준비 또는 대비 비용은 급격히 증가한다. 한국은 복지 지출은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군사비 지출은 세계 10위이다. 남한은 국방비와 전력 면에서 북한에 대해 압도적 우위에 있음에도 매년 국방비를 증액해왔으며 2018년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7% 증가한 43조 1,581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20조원만 줄여도 우리나라 재난적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돈을 해결하여 사실상의 무상 의료가 가능하다(송은철, 신영전, 2015). 또한 이 금액은 기존 기초생활보장, 노인복지예산의 2배, 보육가족 및 여성 예산의 4배에 해당한다. 한 나라가 가진 총 자산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과도한 군사비 지출은 보건복지예산의 축소와 동전의 양면인 셈이다. 더욱이 군사비의 증가는 그 자체가 국가재정의 부담일 뿐만 아니라, 오래 전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이 경고 했듯, 이른바 ‘군산복합체(military-industrial complex)’를 만들어 지속적인 군사 충돌과 긴장을 일상화 한다. 이미 한국도 군산복합체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은 나라가 되었다. 더욱이 최근, 당사자들은 해프닝이라 주장하지만, 한국의 한 대학

이 “인공지능 무기를 개발하겠다”는 표현을 사용하자 해외 저명 로봇 학자 50여 명이 해당 대학교와의 연구 협력을 전면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하였다.

넷째, 전쟁은 상호 연대의 정신을 파괴하고 학문에 있어서도 자유로운 상상과 정책에서 개혁적 시도, 특별히 복지국가로의 이행을 제한한다. 실제로, 냉전, 분단,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역사는 한국 사회에서 ‘반공’과 ‘개발’을 어떤 현실 정치세력도 거스를 수 없는 초월적 이념’이 되게 함으로써 보건의료부문을 포함하여 복지국가로의 발전가능성을 차단하였다(신영전, 김진혁, 2014; 윤희식, 2015).

그 밖에도 전쟁으로 인한 개인과 국민 삶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결론적으로, 전쟁이야말로 보건복지의 궁극적 목표라 할 수 있는 ‘인간 안전보장(human security)’의 진정한 ‘적(敵)’이다. 그런 점에서 평화 학자 요한 갈통(Johan Galtung)은 “안전으로 가는 길은 평화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현재 한반도는 분단과 한국전쟁 이후 최고의 전쟁위기를 지나 이른바 새로운 평화복지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는 단지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평화의 문제이기도 하다. 더욱이 전술한 바와 같이 평화는 보건복지의 전제(前提)이자 그 자체이다. 매일 비처럼 쏟아지는 폭탄 아래에서 가쁜 숨을 내쉬고 있는 이들이 있는 한, 보건복지분야 종사자들은 그 역할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모든 보건복지 분야 학자, 전문가 활동가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평화주의자이어야 하며, 또한 평화를 만들고 지키는 데에도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실제로 2001년 개최된 “건강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health)”회의에서는 전쟁이 질병처럼 1차 예방(조기 발견), 2차 예방(조기치료), 3차 예방(사회재활)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건강을 통한 평화”를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들의 교육·훈련 과정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MacQueen, Santa-Barbara, Neufeld, Yusuf, & Horton, 2001).

결론적으로 모든 보건복지 전문가들은 전쟁의 예방과 조기 종식, 치유를 자신들의 과제로 삼음과 동시에 작금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에도 힘을 모아야 한다. 그러나 평화로운 세계와 한반도를 이루는 것은 지난한 과정이 될 것이다. 이럴 때 우리는 스스로 굳은 마음을 다지게 하는 말이 필요하다. 미국의 진보적 노동운동가이자 평화

운동가 머스티(A. J. Muste)의 말이다.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가 길이다(There Is No Way to Peace, Peace Is the Way).”

2018.6.30.

편집위원장 신영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보건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문재인, 판문점 선언 모두발언, 2018.4.27

김정은, 판문점 선언 모두발언, 2018.4.27

IISS. (2017). *Armed Conflict Survey 2017*.

Lopez, A. D., & Murray, C. C. (1998). The global burden of disease, 1990 - 2020. *Nature medicine*, 4(11), 1241.

MacQueen, G., Santa-Barbara, J., Neufeld, V., Yusuf, S., & Horton, R. (2001). Health and peace: time for a new discipline. *The Lancet*, 357(9267), pp.1460-1461.

UNSG. (2018). *Annual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Children and Armed Conflict (CAAC)*.

송은철, 신영전. (2015). 재난적 의료비 예방을 위한 포괄적 의료비 상한제. *보건사회연구*, 35(2), pp.429-456.

신영전, 김진혁. (2014). 최용석의 생애: 해방직후 보건의료체계 구상과 역할을 중심으로 *의사학*, 23(3), pp.469-511.

윤홍식. (2015). 반공개발국가를 넘어 평화복지국가로. *시민과 세계*(27), pp.57-106.